

한주간 쉽게 보는

# 도내 언론 키워드 동향

Jeju News Keyword Trends

No. 34



# Contents

※ 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※ 대상 기간 : 2025.03.27.~2025.04.02

##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- 정치·행정 ..... 1
- 경제·관광 ..... 1
- 지역·사회 ..... 2

## 1 분야별 뉴스 Word Cloud

- 정치·행정 분야 보도자료의 주요 내용 ..... 3
-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6
-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 ..... 10

## 1 분야별 언론 주요 키워드

○ 제주지역 ①정치·행정, ②경제·관광, ③지역·사회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내언론 키워드 분석 결과

분야	주요 키워드
정치·행정	4·3(추념식), 대통령(탄핵, 선고), 서비스, 크루즈, 청년
경제·관광	관광객, 크루즈, 노선, 여행, 일자리, 연체율
지역·사회	4·3(희생자), 선고(대통령), 불법, 단속, 외국인

※ 분석 기간 : 25.03.27.~25.04.02

대상 언론사 : 한라일보, 제주일보, 제주매일, 제민일보, 삼다일보, 제주의소리, 헤드라인제주

○ (정치·행정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정치·행정	4·3 (추념식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77주년 추념 준비</li> <li>- 추념식 진행 절차</li> <li>- 추모·기념 사업</li> </ul>
	대통령 (탄핵, 선고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통령 탄핵 심판</li> <li>- 선고 기일 확정</li> <li>- 사회적 긴장 고조</li> </ul>
	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 서비스 혁신</li> <li>- 왕진버스 의료지원</li> <li>- 탐나는전 등 소비 진작</li> </ul>
	크루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준모항 크루즈 도입</li> <li>- 크루즈산업 활성화 전략</li> <li>- 글로벌 해양관광 자원</li> </ul>
	청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년농업인 육성</li> <li>- 청년 일자리 창출</li> <li>- 청년 정책 다변화</li> </ul>

○ (경제·관광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경제·관광	관광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관광 수요 확산</li> <li>- 외국인 관광객 지출 변화</li> <li>- 높아지는 재방문률</li> </ul>
-------	-----	--

경제·관광	크루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항 재개와 성장 기대</li> <li>- 준모항 시대 도래</li> <li>- 오버나잇 크루즈 유치</li> </ul>
	노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제주-김포 감소 현황</li> <li>- 국제선 다변화 추진</li> <li>- 항공사별 차별화</li> </ul>
	여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장애 관광 페스타</li> <li>- 다양한 팸투어 확대</li> <li>- 여행 트렌드 변화</li> </ul>
	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년 일자리 확대</li> <li>- 소상공인 금융지원</li> <li>- 공공·재정 일자리 확충</li> </ul>
	연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예금은행 연체율 상승</li> <li>- 금융기관 긴급 협의</li> <li>- 취약계층 보호</li> </ul>

○ (지역·사회 분야) 주요 보도 내용

지역·사회	4·3 (희생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념식과 봄날 아침</li> <li>- 특별법 개정 동향</li> <li>- 기억의 세계화</li> </ul>
	선고 (대통령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헌법재판소 판결 임박</li> <li>- 도민사회 반응</li> <li>- 후속 영향과 전망</li> </ul>
	불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불법 관광 영업 적발</li> <li>- 불법사행성 게임장</li> <li>- 농경지·임야 무단 매립</li> </ul>
	단속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음주운전 특별단속</li> <li>- 불법 체류·범죄 집중단속</li> <li>- 불법 조업 외국어선</li> </ul>
	외국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외국인 환자 증가</li> <li>- 중화권 관광객 대비</li> <li>- 외국인 주민정착 지원</li> </ul>



	<p>4·3 (추념식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념식 진행 절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식전행사는 종교 의례와 공연으로 희생자 영령을 기리는 방식임. 이후 사이렌 묵념으로 본행사가 시작됨. 분향, 헌화, 추념사 등이 이어져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는 핵심 행사로 자리매기는 실정</li> <li>· 올해 제77주년 추념식 표어는 4·3정신을 세계로 확산하자는 취지임. 행사장에서는 평화 시 낭송, 추모 공연 등이 열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장이 펼쳐지는 상황임 새로운 의미</li> </ul> </li> <li>- 추모·기념 사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행방불명 희생자 유해 발굴과 신원 확인 사업이 지속됨. 과거의 억울함을 풀고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는 핵심 절차임.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 기구로 지원 강화의 기반이 마련되는 추세</li> <li>· 4·3영화, 문학, 교육 프로그램 등 문화·예술 매체를 통한 홍보도 활발함. 특히 청소년 교재와 전시 지원으로 미래 세대가 4·3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계승토록 돕는 역할 수행</li> </ul> </li> </ul>
<p>정치·행정</p>	<p>대통령 (탄핵, 선고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통령 탄핵 심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난해 말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해 헌법재판소 심리가 장기간 이어진 상황임. 비상계엄 선포 적법성 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며 찬반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펼치는 상황</li> <li>· 대통령 측은 국가비상사태에 준한 위기였다고 항변하며 위헌·위법성을 부인함. 군·경 동원 등 주요 행위가 헌정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했는지가 파면 여부를 가르는 핵심 변수</li> </ul> </li> <li>- 선고 기일 확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헌법재판소가 4일 선고 기일을 확정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최대치임.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즉시 파면돼 조기 대선 등 정치 지형이 대대적으로 요동칠 전망</li> <li>· 기각 혹은 각하 시에는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해 향후 국정운영에 속도가 붙을 가능성임.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든 큰 파장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것이라 예측</li> </ul> </li> <li>- 사회적 긴장 고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찬반 양측이 집회와 시위를 잇달아 예고함. 정부·사법기관 건물 보호와 불법행위 차단을 위해 경찰이 대규모 비상 배치를 준비하는 등 최고 단계 안전대책을 가동 중인 상태</li> <li>· 지역사회도 이번 선고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뒤섞임. 4·3추념식 직전까지 탄핵 갈등이 겹쳐 도민과 방문객 모두 혼란을 겪을 여지가 커 사회적 안정을 위한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</li> </ul> </li> </ul>
	<p>서비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행정 서비스 혁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가 '제주간편e민원'을 통해 온라인 민원 서비스를 확대하는 움직임임. 도민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24시간 각종 증명이나 신청을 처리하는 흐름이 가속되는 추세</li> <li>· 특히 읍·면·동 현장 업무량이 경감되고, 도민 편의가 높아지는 효과가 예상됨.</li> </ul> </li> </ul>

	서비스	<p>디지털 소외계층을 위해 상담 인력을 확충하는 등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하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한 과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왕진버스 의료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농촌지역 주민들을 위해 ‘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’가 본격 운영되는 중임. 병·의원이 적고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전문 의료진이 직접 방문해 각종 진료와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사업</li> <li>· 단순 진료 외에도 물리치료·구강검진 등 통합 서비스를 제공함. 농어촌 고령화 심화에 따른 의료 사각지대를 줄이고 도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이 기대</li> </ul> </li> <li>- <b>탐나는전 등 소비 진작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탐나는전 사용 혜택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조치가 시행됨. 적립률과 월 구매 한도를 높여 도민의 소비 여력을 늘리려는 목적이 반영된 상황</li> <li>· 서비스 확대로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가 가능함. 다만 예산 부담과 정책 유지에 대한 고민이 뒤따르며,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재정 운용 방안이 필요</li> </ul> </li> </ul>
정치·행정	크루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준모항 크루즈 도입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가 단순 경유지를 넘어 출발지로 활용되는 ‘준모항 크루즈’가 연내 운항을 시작함. 서귀포 강정항을 출발해 중국·일본 노선을 잇는 대형 크루즈 선사가 모객을 추진하는 계획</li> <li>· 해외를 거치지 않고도 제주에서 바로 국제 크루즈 여행을 즐길 수 있게 되는 이점임.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규 관광자원 창출 효과가 기대되나, 인허가와 기반 시설 확충이 과제로 부상</li> </ul> </li> <li>- <b>크루즈산업 활성화 전략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로 중단됐던 크루즈 운항이 재개되면서 입항 횟수가 빠르게 증가함. 제주 방문 후 도내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체류 프로그램 및 기항지 관광상품 다변화가 중요한 시점</li> <li>· 야간 정박 등을 유도해 지역 체류 시간을 늘리고, 항만·터미널 개선도 추진되고 있음. 관련 통계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정책 수립과 효과 분석에 활용하는 ‘크루즈산업 통합 관리’도 논의</li> </ul> </li> <li>- <b>글로벌 해양관광 자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형 크루즈선이 정기적으로 취항하면 외국인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. 숙박·교통·면세점 등 연계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이며, 도민 참여형 사업으로 지역 상생 방안 마련이 과제</li> <li>· 제주항과 강정항이 환승 거점으로 부상하려면 시설 확장과 교통 편의성 제고가 이뤄져야 함. 자연·문화 자원을 연계한 특화 콘텐츠로 크루즈 관광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이 계속되는 실정</li> </ul> </li> </ul>





○ 경제·관광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경제·관광	관광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개별관광 수요 확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내 관광시장에서 개별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, 항공권·숙박·이동수단 예약 플랫폼 활용 증가가 두드러짐. 자유로운 일정 관리와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선호하는 경향이 더욱 강해지는 추세</li> <li>· 대형 단체여행보다 개인·소규모 방문객 비율이 높아지면서, 지역 상권 및 체험형 프로그램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침. 이에 따라 지역 특색과 연계된 로컬 상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져 관광 다변화가 기대</li> </ul> </li> <li>- 외국인 관광객 지출 변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외여행 재개로 외국인 방문객이 늘었으나, 항공료 상승과 경기 둔화로 인해 머무는 기간 대비 지출 규모가 감소하고 있음. 주로 합리적 쇼핑과 관광지 중심 소비하는 패턴이 확산되는 분위기</li> <li>· 면세점보다는 시내 로드숍이나 전통시장 등에서 가격 경쟁력 있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향이 커지며, 음식점·카페 등 중소형 매장을 찾는 사례도 늘고 있음. 외국인 대상 세분화된 맞춤형 홍보가 필요</li> </ul> </li> <li>- 높아지는 재방문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최근 내국인 관광객 재방문률이 꾸준히 상승해, 특정 계절마다 제주를 찾는 '팬덤 관광' 현상도 나타남. 기존에 경험하지 못한 체험 프로그램과 숨은 명소 발굴을 위한 여행 수요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</li> <li>· 반면 외국인 재방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아 전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. 문화·자연·음식 등 제주의 매력을 한층 더 입체적으로 전파함으로써 중장기적 유입을 이끌 전략이 요구</li> </ul> </li> </ul>
	크루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운항 재개와 성장 기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던 크루즈가 속속 운항을 재개하며, 올해 최대 80만 명 이상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됨. 중국·일본·대만 등 주변국 수요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는 실정</li> <li>· 크루즈 관광은 고가 소비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커, 기항지 쇼핑·식음료·체험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 가능성이 큼.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반 시설 및 현장 대응 역량 강화가 필수</li> </ul> </li> <li>- 준모항 시대 도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강정항이 출도착지 역할을 하는 준모항으로 운용됨에 따라, 크루즈 여행객들이 제주에서 시작해 다른 나라로 이어지는 새로운 노선이 마련됨. 항공보다 여유로운 기항 관광 수요를 유인하는 기회가 될 전망</li> <li>· 준모항을 통한 관광객은 체류 시간이 길어 지역 소비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, 현지 투어 프로그램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임. 전담 안내 서비스와 물류·통관 절차 단축 등 행정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는 실정</li> </ul> </li> <li>- 오버나잇 크루즈 유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야간 정박을 통해 승객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지역 명소를 둘러볼 수 있도록 하는 '오버나잇 크루즈' 유치가 주목받고 있음. 숙박·이벤트·야시장 등 부가 프로그램을 결합해 밤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

	<b>크루즈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야간 크루즈 운항 시 항만 안전과 교통관리 등이 뒷받침돼야 하며, 무장애 관광시설 구축으로 장애인·고령자 접근성도 고려해야 함. 다채로운 야간 콘텐츠 개발이 지역 체류 연장을 촉진할 핵심 과제로 부상</li> </ul>
<b>경제·관광</b>	<b>노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제주-김포 감소 현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하계 시즌 편성에서 제주-김포 노선이 주 799편으로 줄어들어 좌석난과 항공권 가격 상승이 우려됨. 수요가 가장 많은 핵심 노선 축소가 지역 내 관광객 유입에 변수가 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</li> <li>· 반면 지방공항 연계 노선은 일부 늘어나, 지역 간 이동 편의성 확대라는 긍정적 효과도 기대됨. 다만 제주 최대 관광수요가 몰리는 김포 노선 축소가 가져올 여파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 지원이 요구</li> </ul> </li> <li>- <b>국제선 다변화 추진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국·대만·일본·싱가포르 등 노선 확대를 통해 해외 관광객 유입을 늘리는 전략이 부각되고 있음. 노선 증편이나 신규 취항을 통해 국제 접근성을 높여 외국인 방문객 증가를 꾀하려는 의도</li> <li>· 항공사별로 운항 스케줄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비자 지원책 등을 강화해, 비수기에도 외국인 관광객 수요를 안정적으로 유치할 수 있어야 함. 장기적으로 방문자 수 증대 및 항공 인프라 정비가 필요함</li> </ul> </li> <li>- <b>항공사별 차별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한항공은 지방 노선 위주로 편성을 확대하는 한편, 제주항공은 제주발 국제선 재취항에 힘을 쓰는 등 노선 전략을 달리하고 있음.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항공권 프로모션도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</li> <li>· 특히 성수기 수요 대응을 위해 중·대형기 투입과 임시 증편을 계획하는 등, 탄력적 좌석 공급 체계가 가동될 전망이다.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, 서비스 품질이 노선 선택의 주요 기준으로 부상</li> </ul> </li> </ul>
	<b>여행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무장애 관광 페스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 장애인·고령자·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 약자를 위한 '열린 관광 페스타'가 열림. 무장애 올레길 걷기 행사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보이며, 맞춤형 편의시설을 확충 중임</li> <li>· 참여 기업과 기관에서 할인 및 추가 서비스를 제공해, 접근성 높은 여행 문화를 확산시키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려 함. 체험 프로그램도 주간별로 운영해 실질적인 관광 기회를 확대하려는 노력이 이어지는 상황</li> </ul> </li> <li>- <b>다양한 팸투어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만 가오슝 지역 주요 여행사와 매체를 초청해, 제주만의 풍광·웰니스·문화유산을 체험하는 팸투어를 진행함. 신규 취항 노선과 연계해 현지에서의 제주 상품 개발과 판매 확대를 적극 지원</li> <li>· 해외 MZ세대 인플루언서를 초청하는 'JJ프렌즈' 프로젝트로 SNS 홍보 효과를 극대화, 한류 콘텐츠와 연계한 감성 여행 수요를 잡으려 함. 지역 특색을 살린 프로그램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려는 전략</li> </ul> </li> <li>- <b>여행 트렌드 변화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항공료와 숙박비를 절약하면서도 체험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여행객이 늘어나, 공유숙박·렌터카 합승 등 혁신적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. 소규모</li> </ul> </li> </ul>

경제·관광	여행	<p>개인 여행으로 일정 조절과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분위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 문화·자연환경·현지인 생활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커짐. 특히 전통시장이나 농가 체험, 작은 마을 투어 등 로컬 중심 여행 콘텐츠가 ‘한 번 더 가고 싶은 제주’ 이미지 조성</li> </ul>
	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청년 일자리 확대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정은 청년층 유입과 고용을 위해 런케이션·청년 인턴십·콘텐츠 분야 채용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함. 관광·문화·ICT 분야 중심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해 인구 유출을 막고 활력을 불어넣으려 하는 실정</li> <li>· ‘하영드림 주택마련’이나 ‘청년이어드림’ 등 주거·자금 지원 정책도 병행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함. 이를 통해 청년 맞춤형 인재 양성과 일자리 수요가 연계될 것으로 기대</li> </ul> </li> <li>- <b>소상공인 금융지원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600억 원 규모의 ‘희망더드림 긴급 특별보증’을 편성하고 이자 차액을 보전함. 보증심사 기준 완화와 보증료 인하로 한 업체당 연 최대 120만 원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</li> <li>· 지역 상권 침체 장기화에 대응해 임대료 지원, 출산 급여, 대체 인력 보조 등도 실시해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고 있음. 골목경제 회복을 위해 행정과 금융권의 협업 체계가 더욱 긴밀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증가</li> </ul> </li> <li>- <b>공공·재정 일자리 확충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경기가 둔화된 가운데 도정은 1회 추경 2194억 원을 편성해 공공근로 사업과 다양한 일자리 지원에 박차를 가함. 구직 취약계층부터 전 연령층이 참여 가능한 사업 구조로 구축해 실업률 상승을 억제하려 하는 상황</li> <li>· 지방공기업·공공기관의 맞춤형 채용도 확대돼, 청년 인력은 물론 중장년층 재취업 기회도 넓어지는 추세임. 이로써 지역사회 안정과 경제활동 기반을 동시에 높이는 다각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</li> </ul> </li> </ul>
	연체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<b>예금은행 연체율 상승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올해 1월 제주 예금은행 연체율이 1.14%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으며, 전국 평균 0.44%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임. 금리 인상, 소비 둔화 등이 겹쳐 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워진 가가와 기업이 급증한 결과</li> <li>· 기업 대출과 가계 대출 모두 연체율이 고르게 오르면서, 지역 전반에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. 특히 농지담보대출 연체 사례가 늘어나 1차 산업 종사자에 대한 대책도 시급한 실정</li> </ul> </li> <li>- <b>금융기관 긴급 협의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도와 지역 내 8개 금융기관이 긴급 간담회를 열고 연체율 급등에 따른 대책을 모색함. 농지법 개정에 따른 거래 위축, 소상공인 운영난, 부동산 경기 냉각 등 복합 요인을 분석해 단계적 해법 마련</li> <li>· 금융권은 보증확대·대환대출·신용 관리 컨설팅 등 지원책을 검토 중이며, 도정은 취약계층 대상 금융복지상담센터 설립과 함께 금리·법률 상담 서비스를 강화하려 함. 부실채권 예방 차원의 협력 방안도 논의</li> </ul> </li> <li>- <b>취약계층 보호</b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소득이 낮거나 신용도가 낮은 계층은 기존 대출 만기가 도래할 경우 상환이</li> </ul> </li> </ul>

경제·관광	연체율	<p>어려워지면서 연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함. 금리 상승 기조가 이어지면 재무구조 악화로 자금 유동성 확보가 힘들어질 우려가 증가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이를 완화하기 위해 중·장기적으로 금리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정책자금, 이차보전, 채무 조정 등이 필요함. 취약계층이 신속하게 상담받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역 사회와 행정의 유기적으로 협업 필요</li> </ul>
-------	-----	---

○ 지역·사회 보도자료의 워드 클라우드를 살펴보면, 주요 키워드는 4·3(희생자), 선고(대통령), 불법, 단속, 외국인 등으로 나타남



[그림 3] 지역·사회 분야 뉴스의 Word Cloud

○ 지역·사회 분야 보도자료의 세부 내용

지역·사회	4·3 (희생자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추념식과 봄날 아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·3희생자 추념식이 봄날에 진행되어, 유족과 도민들이 희생자 넋을 기리며 함께 슬픔을 공유하는 상황임. 화창한 날씨 속 묵념과 헌화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아픔을 되새기는 모습</li> <li>· 희생자 유족의 인터뷰를 통해 4·3의 아픔과 화해 의지를 전하며, 앞으로 과제 해결을 촉구하는 흐름임 명예회복과 배보상 절차에 대한 개선 방안이 언급되면서 관심을 모으는 양상</li> </ul> </li> <li>- 특별법 개정 동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·3특별법 개정 추진 소식이 전해지며, 희생자 보상과 왜곡 처벌 마련 요구가 부각되는 상황임 유족과 시민단체의 움직임으로, 국회 차원의 논</li> </ul> </li> </ul>
-------	--------------	--

	<p>4·3 (희생자)</p>	<p>의와 정부 지원책이 촉구되는 흐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개정안은 4·3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 기반을 구축해, 보상과 명예회복 강화를 도모하는 흐름임 재원 마련과 행정지원 방안이 논의되며, 지역사회 긍정적 기류가 확산되는 양상</li> </ul> <p>- 기억의 세계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4·3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해 국제사회와 교류하며, 비극을 함께 성찰하는 계기가 마련되는 추세임 해외 교민 사회에서도 희생자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며 공감대가 커지는 모습</li> <li>· 미군정 당시 책임규명과 미국 정부의 공식사과 문제도 거론돼, 국제 협력을 통한 진상확인 노력이 강조되는 양상임 기록물 보존과 세계적 관심 유도로 화해·상생의 가치가 부각되는 상황</li> </ul>
<p>지역·사회</p>	<p>선고 (대통령)</p>	<p>- 헌법재판소 판결 임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, 전국적으로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운데 제주에서도 시국동향이 주목되는 상황임 주요 기관에 경찰력 배치 등 혼란 예방 조치가 이뤄지는 모습</li> <li>· 정당과 시민단체 입장이 분분해, 탄핵 인용과 기각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고조되는 흐름임 결론에 따라 향후 정국이 크게 요동칠 것으로 예상돼 긴장감이 고조되는 국면</li> </ul> <p>- 도민사회 반응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일부 단체들은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,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수호를 호소하는 양상임 4·3과 연결짓는 역사적 맥락이 언급되면서 국민적 관심을 이끄는 분위기</li> <li>· 반면 탄핵에 반대하는 단체도 맞불 집회를 예고하며, 도민 여론이 양분화되는 모습임 평화적 시위를 강조하지만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</li> </ul> <p>- 후속 영향과 전망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정부 정책과 정국 향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, 제주 현안 사업에도 직접·간접 영향을 줄 가능성이 거론되는 추세</li> <li>· 탄핵이 인용되면 권한대행 체제나 조기 대선 등이 논의될 수 있고, 기각 시 정국 혼란이 재점화될 우려도 있음 시민사회단체는 차분한 대응과 합의를 촉구하는 입장</li> </ul>
	<p>불법</p>	<p>- 불법 관광 영업 적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중화권 관광객 대상 무등록여행업·불법유상운송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돼, 업계 신뢰도 하락 우려가 커지는 상황임 적발된 업체는 사법처리되며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</li> <li>· 불법영업으로 인한 관광 이미지 훼손이 대두되며, 합법 업체와 상생 협력이 요구되는 흐름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에 대한 목소리가 확대되는 양상</li> </ul> <p>- 불법사행성 게임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경찰 단속에 적발돼, 건전한 게임문화 훼손과 사회 문제로 지적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양상임 현장에서 대규모 게임기와</li> </ul>

지역·사회	<b>불법</b>	<p>불법 수익금이 압수되며 단속이 강화되는 분위기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업주들의 교묘한 수법으로 음성화·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어, 경찰은 첩보 강화와 시민 제보 협조를 강조하는 모습임 건전한 여가 문화 확립을 위한 제도 보완이 언급되는 상황</li> </ul> <p><b>- 농경지·임야 무단 매립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대규모 토사가 불법 반출돼 중산간 임야와 농경지에 무단 매립된 사실이 적발돼, 환경훼손 우려가 부각되는 분위기임 자치경찰 수사와 행정처분이 이뤄지면서 현장 보전 조치가 내려진 상황</li> <li>· 환경단체들은 공사장 사토 관리 미흡을 지적하고, 적극적인 행정감독과 원상복구 요구를 펼치는 흐름임 토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이 중요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</li> </ul>
	<b>단속</b>	<p><b>- 음주운전 특별단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제주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합동으로 봄철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시행해, 시민 안전 확보에 총력임 주말·야간 중심 단속으로 적발 사례가 늘어나며 운전자 경각심이 커지는 양상</li> <li>· 외국인 운전자도 단속 대상에 포함돼, 통역 인력을 활용해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는 분위기임 재범 방지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추세</li> </ul> <p><b>- 불법 체류·범죄 집중단속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도내 외국인 강력범죄 억제를 위해 '100일 특별치안기간'이 운용돼, 기동순찰대가 집중 단속을 펼치는 상황임 불법 체류자 취업 실태와 불법 숙박업 등이 점검 대상</li> <li>· 외국인 대상 안내와 교육이 병행돼, 법질서 준수 필요성을 강조하는 흐름임 무등록 상태로 운행하거나 범죄에 연루될 경우 강력 제재 방침이 예고되는 모습</li> </ul> <p><b>- 불법 조업 외국어선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해경이 제주 해역에서 불법 어구를 적재하거나 무허가 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을 잇달아 나포해, 해양주권 수호를 강화하는 양상</li> <li>· 어족자원 보호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대형 함정과 항공기를 동원한 합동단속이 이루어지며, 담보금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지는 추세</li> </ul>
	<b>외국인</b>	<p><b>- 외국인 환자 증가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난해 제주 외국인 환자 수가 2만명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, 의료관광 분야가 부상하는 흐름임 무사증 제도 영향과 피부·성형 진료 수요가 주 요인으로 분석되는 상황</li> <li>· 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이 주를 이루지만, 종합병원 등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어 의료인력 확충과 시스템 마련이 요청되는 양상</li> </ul> <p><b>- 중화권 관광객 대비</b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불법여행업과 무자격 안내가 성행하는 상황에서, 자치경찰단이 특별단속을 벌이며 관광질서 회복에 나서는 모습임 중화권 시장 회복으로 입도객이 늘어나는 추세 속에서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이 강조</li> <li>· 공·항만에서 혼잡을 줄이기 위해 교통 관리와 안내 서비스가 강화되는</li> </ul>

지역·사회	외국인	<p>분위기임 여행사의 합법 운영과 방문객 만족도 향상을 위해 민·관 협력이 요청되는 국면</p> <p>-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· 지역에 정착한 외국인 노동자와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면서, 생활 인프라와 행정지원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는 양상임 언어 소통 문제와 복지제도 접근성 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이 요구되는 상황</li> <li>· 각종 범죄 및 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·소방과의 협력이 이루어지고, 지역사회와의 교류 프로그램이 확대되는 흐름임 안전한 환경 조성 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는 모습</li> </ul>
-------	-----	--

※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(연구기획부)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,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.